



지방의회 정책세미나

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편

2024. 6. 28.

구미경 서울시의원

목 차

1.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성과
2. 현행 제도의 문제점
3. 제도 개선안

1.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성과

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향상
(조례발의, 자료요구, 질의서 작성 등)

지방의원 보좌기능 강화
(보도자료 작성, 일정관리, 민원청취 등)



조례발의 건수 약 **26%** 증가

(제10대 대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1년 기준, [더팩트 230726 기사](#) 참조)

제11대 의원보도자료 **4,855**건

(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기준, 2024년 6월 현재)

2. 현행 제도의 문제점

모호한 업무분장

- 의원-정책지원관-타 부서 직원간 생각하는 업무범위 불일치
- 특히, 정책지원관과 상임위간 역할과 책임 불명확



- 정책지원관의 업무 회피 발생
- 의원마다 정책지원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의원-정책지원관간 갈등 초래
- 정책지원관의 사기 저하 우려

제도 운영의 현실성 부족

- 1명 의원당 0.5명 정책지원관 배치
- 정책지원관 정치적 중립 의무
- 갑작스런 결원시, 대체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



- 관정책지원관 0.5명/1의원으로 적시 지원불가
- 홍보관련 업무 불가
- 의원들의 업무 피로도 상승
- 역동적인 의정활동 불가능

사기진작요인의 부족

- 의원-정책지원관 배정 기준 모호
- 정책지원관 평가제도 불명확
- 정책지원관간 업무 능력 차이 큼
- 고정된 직급 임용(광역 6급, 기초 7급)으로 승진 기회 부재



-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 어려움
- 정책지원관 능력 격차로 의원 불만 야기

3. 제도 개선안

1 현행 제도 하에서 : 법령 개정 없이

업무범위 명확화 :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임무와 업무범위 설정 필요

급수 조정으로 독자적인 승진기회 제공 및 사기진작

- (광역) 7급 채용 → 6급 승진, (기초) 8급 채용 → 7급 승진

채용절차 및 평가체계 개선

- 전문성 검증 필기시험 강화 및 심층 면접 도입 필요
- 석박사/경력 우대제도 필요
- 정책지원관에게 지원받은 모든 의원들의 평가 체계 마련

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제도 마련

3. 제도 개선안

2 기본적 개선안 : 법령개정 필요

별정직 전환 : 의원이 직접 임면하여 책임과 권한을 강화

1인 1지원관 도입 : 현재 0.5명에서 증원을 통해 1인으로

지원관을 정책분야와 보좌분야로 전문화 : 장기적 과제

감사합니다

